

쌀 협상 국정조사 평가 및 쌀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 의)는 전국 농민대표자 약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쌀 협상 국정조사 평가 및 쌀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에 이번호에서는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요약 정 리하여 정부,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 신 명 운 ■ 한농연정책부회장 >>>

국내 쌀산업 · 농가소득안정 대책수립, 협상 책임자 처벌, 협상시스템의 철저한 정비 등 가시적 조치 없이 쌀협상 국회비준을 강행하면 안됨

특히 2005년말 국내 쌀 재고가 1,046만석으로 증가하고 2014년까지 쌀값은 80kg 당 12만 2000원까 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정부는 ▲고정직불금을 ha당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발농업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공공비축 목표를 1000만석으로 늘리고 매년 500만 석을 수매해야 됨



아울러, 쌀 협상 문제점으로 ▲실무추진단에 농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체계가 없었고 ▲농민단체와 국회에 이면합의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으며 ▲중국산 사과·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관련사항을 농림부 과수화훼과가 통보받지 못하는 등 협상시스템에 총체적 문제점이 있음

■ 윤장배 ■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

농민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정부는 10년간 관세화를 유예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비준 동의를 조기에 완료할 필요가 있음. 특히 비준 동의가 지연될 경우 고가입찰, 저급쌀 입찰 등 부작용이 예상됨

토론자

■ 홍문표 ■ 한나라당 의원 >>>

이번 협상은 부가합의든 이면합의든 농민피해는 불가피함. 더욱 큰 문제는 부가합의가 쌀 협상 피해액보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음. 예를들면 중국산 사과·배와 쇠고기 수입시 각각 2,148억원·8000억원 손실이 예상됨

또한 이번 협상에 대통령의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이번 협상을 무슨 근거와 원칙으로 잘된 협상이라고 규정지었는지 확실한 설명이 필요함

■ 조일 현 ■ 열린우리당 의원 >>>

국정조사 핵심은 이면합의 존재 여부였음. 특히 WTO 협상에 대한 사상초유의 국정조사였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

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의 큰 문제점은 협상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였고 협상 전략 및 대안이 부족하였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정조사를 통해 과정·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임

그러나 한국 농업 모두가 외국 농산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비준 반대는 안되며 이번 토론회 등을 통해 농민단체도 대안을 제시해야 함. 농민들 또한 시혜적·구호적 입장에서 정부에게 무조건 적으로 내어놓으라는 식은 안됨. 국내 쌀이 외국 쌀에 경쟁력이 안되고 관세화유예 등 소비자 시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함

이에 농민들은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설득해야하며 농업을 경쟁 농업으로 육성해야 함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는 농정불신에서 기인되어 왔음. 이에 이번 쌀협상 국회비준 역시 국민·농민·국회의원에게 분명한 설득 없이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움

마지막으로 농민들은 대책없는 국회비준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의원에게 비준반대 사인을 요구하지 말아야 함

■ 윤석 원 ■ 중앙대학교 교수 >>>

쌀 협상은 매우 힘든 협상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전대미문의 통상 협상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것과 농민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임. 그리고 정부가 겸허한 반성도 없이 잘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참고로 이번 협상은 잘 된 협상이라고 볼 수 없음. 수입쌀 소비자 시판은 6월에 거의 결정되었고, 부처간 업무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확실히 정리된 것이 없으며 자동관세화론 및 관세화의무를 운운하는 등 협상전략도 잘못되었음

이에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양해를 구해야 함 ▲대국민에게 요구사항을 알려야 함 ▲쌀대란에 대비한 쌀대책을 만들어야 함 ▲협상의 투명성 제고해야 함 ▲학교급식법 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서진 교 ■ 농경연 연구위원 >>>

이번 협상 결과는 관세화 10년간 유예를 확약 받았음. 이에 7.96% 의무수입물량은 과도한 양보가 아님. 또한 중국산 사과·배 등 부가합의는 수입 허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면합의가 아님

그렇지만 통상정책에서 농민단체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고 국회에 비공개라도 보여줬어야 함. 그리고 정부가 비준 반대는 곧 관세화라고 농민을 놓고 도박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이재길 ■ 외교통상부 DDA협상 대사 >>>

국정조사 주요 쟁점은 이면합의와 과도한 양보가 주요 쟁점이었음. 그러나 35일간 국정조사 결과 이면합의 존재는 없었음. 또한 작년에 협상 결과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로 한 이유는 3개월 검증기간에 다른 협상국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우리나라는 협상 초기 쌀만 국한해서 협상을 진행하려 했음. 그러나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가 쌀만 국한되어 있다고 WTO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부가합의를 하게 되었음. 아울러 쌀 협상과 상관없이 검역절차는 진행되는 것이고 '신속한'이라는 표현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양보를 한 것은 아님.

또한 이번 협상이 부처간 협의와 협상 전략이 없다고 주장하나 농림부 차관이 대표로 하는 데스크포스팀이 운영되어 어느 협상보다도 원활한 협의가 진행됨

또한 쌀협상 국회비준이 부결된다는 것은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준 동의안 부결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나라 쌀 시장 전면 개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임. 그리고 DDA 협상 결과가 끝나고 보자는 것은 DDA협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임

그러나 국회비준이 이전에 국내 대책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동의함

■ 김진필 ■ 한농연전북도연합회 >>>

우리나라 통상정책은 조삼모사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리고 오늘 외교통상부와 조일현의원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고 노무현 정부는 정부 예산 10%이상 농업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공약을 어기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재배하는 자포니카 쌀은 13%에 불과함. 또한 우리나라 농지 규모는 세계 92위이며 농지 비중은 109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함. 특히 우리 쌀은 경쟁력 있음에도 정부는 과민반응을 보고 있음

이에 정부는 ▲생산 대비 1/3 이상은 정부에서 구매해야 하고 ▲공매곡 입찰은 지연하고 ▲대복지원 정례화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119조 투융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함



■ 박정희 ■ 그린훼밀리운동연합 >>>

차별화된 친환경 농업이 육성되어야 함.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함.